

2008. 4. 30. (水)

第170回 束草市議會 (第2次 本會議)

市政質問 答辯書

1. 동우대 활성화 방안에 대한 진행현황
(김강수 의원 → 시 장)
2. 심충수 개발, 이대로 좋은가
(김강수 의원 → 시 장)

束 草 市

市政質問 答辯書

質問의원	김 강 수	소관부서	자치행정과
제 목	동우대 활성화 방안에 대한 진행 현황	답 변 자	시 장
먼저 연일 왕성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홍우길 시의회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동우대학은 1981년 개교 이래 영북지역 향토인재 양성의 산실이자 지역경제 발전을 견인하는 큰 축으로 작용해 왔으나, 지속적으로 신입생이 감소되자 재단측은 자구책의 일환으로 동우대학 일부학과와 원주 문막캠퍼스 이전계획을 발표하기에 이르러 우리시 발전과 지역경기 전반에 걸쳐 위기감을 가져 온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경제적 피해 최소화를 위해 다각도의 방안을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음을 우선 말씀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이해하시다시피 작금의 우리나라 대학경영체제는 동우대학 뿐만 아니라 일부 유명 종합대학을 제외한 전국의 대학들이 신입생의 점진적 감소와 서울을 위시한 수도권 편중 입학경향, 외국 유학 열풍 등으로 인한 입학·재학생 감소로 대학별 통·폐합 등 무한경쟁체제로의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와 같은 맥락에서 동우대학에서도 입학생 감소에 따른 재정운영의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일부학과 이전계획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시는 지난 제156회 임시회 시정답변에서 밝힌 바와 같이 동우대학 일부학과 이전은 단순한 학과이전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시 자립기반을 위협받을 수 있는 중대한 사안으로 인식하고 대처하는 것에는 변함이 없으며, 이에 대한 신중한 요인분석과 실천방안 마련을 통해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우리시가 할 수 있는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여 힘써 나가겠다는 의지를 거듭 천명하면서 질문사항에 대해 순차적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와 네 번째 질문중

먼저, 문막캠퍼스가 준공되고 학과 이전이 본격 추진되는 시점을 감안하여 학생감소로 인해 오는 학교 주변 지역의 변화추이를 면밀히 검토하면서 市와 동우대학간 협력사업으로 추진중인 「속초시관학협의회」에 연구과제로의 부여와

네 번째 질문 중, 동우대 신입생 감소에 따른 학교인근 원룸 등 학생대상 임대숙사업 주민 피해와 택시업 등 서비스업 피해 규모에 대한 파악을 「속초시 관학협의회」에 연구과제로 부여하여 대안을 모색하겠다고 하였는데 연구과제를 부여하였는지, 이에 대하여 어떤 대안을 모색하였는지에 대해 질문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시에서는 「동우대학 입학정원 축소에 따른 대응전략 및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연구과제를 「속초시관학협의회」의 2007 연구과제로 선정되도록 요청하였으나 2007. 2. 26일 본 관학협의회 연구과제 선정 심의시 시급성의 이유를 들어 선정되지 않아 채택되지 못하였습니다.

또한, 2007. 12. 5일 동우대학 前이원재 학장을 비롯한 관계관 협의를 통해 '동우대학 활성화용역'을 우리시와 동우대학 공동으로 발주 하자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나 최근 재단사정으로 동우대학장의 교체가 이루어지는 관계로 현재까지 담보상태에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시에서는 금년도에는 「속초시관학협의회」 연구과제로 본 사항이 선정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으며, 만약 본 협의회 연구과제로 미선정될 경우 동우대학과 공동으로 본 용역을 추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향토장학사업에 대해서 지역학생들이 외지로 안 나가고 고향에서 수혜를 받으면서 공부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장치를 마련하였는지, 셔틀버스 운행방안을 해당업체와 협의하여 성사되었는지에 대해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장학사업에 대하여는 지난해 김진기의원 발의로 2008. 1. 8일 「속초시애향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가 제정되어 그 기틀이 마련되었으며, 장학기금 조성목표액 30억원을 확보토록 계획하고 있으며, 장학사업 시행은 기금이 10억원 이상에 이르면 대상학생 특히, 동우대 입학·재학생 다수가 수혜를 받도록 하여 지역향토 인재육성은 물론 동우대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 입니다.

셔틀버스 운행에 대하여는 학생들에게는 편의를 제공하는 성과는 있겠지만, 학생들이 학교 주변에 머무는 시간이 줄어들 경우 학교 주변 상가들의 수익에 크게 영향을 주게 되는 한편, 택시 등 대중교통 업체에도 지장이 예상되기에 현재로서는 셔틀버스 도입을 유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세 번째로 동우대 인근주민, 택시업 등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시민과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가칭)동우대발전 범시민 후원회를 확대하여 운영하고 있는지, 아니면 순수하게 시민과 시민단체가 주도되어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후원회라면 市에서는 후원회 활동이 활발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 무엇을 지원하였는지에 대해 질문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동우대발전 범시민 후원회의 확대·운영문제는 지난 제156회 임시회에서도 답변 드렸듯이 무엇보다도 순수한 시민과 시민단체가 주도하여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범시민 참여유도와 「뭉」 조성 차원에서 바람직하다고 여겨지며,

행정에서는 학교측과 후원회간 서로 상충하거나 협력·협조가 필요한 사안에 대해 조정내지는 권고를 통해 후원회 활동이 활발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하고자 하였으나, 지금에 와서는 새로이 구성된 노학동(노리)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김남신)가 2007. 3. 31일 합의서 파기 및 파기책임을 동우대에 있음을 통고하면서 동우대 발전 범시민위원회는 사실상 기능을 상실한 상태임을 말씀 드립니다.

따라서, 우리시로서는 상기 위원회 간에 정리가 명확히 이루어지면 행정지원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市에서는 해당주민(마을·업체)에 대한 지원대책은 주민 대책위와 학교측 간에 체결한 합의서에 기초하여 합의 내용이 성실히 이행될 수 있는 차원에서 학교측과 긴밀히 협의 하겠다고 하였는데 무엇을 협의하였는지에 대해 질문 주셨습니다.

「동우대학 발전을 위한 범시민 대책위원회」는 ‘동우대학과 지역발전, 문막캠퍼스 이전과 온천개발’, ‘동우대 보건계열 신설유치 등’에 대하여 「동우대학-지역주민간」 상호노력 하기로 하고 2005. 3. 16일 동우대학에서 합의서를 체결하였으나

동우대학이 보건계열인 안경학과를 동우대학 대신 경동대에 유치 하자 주민들은 주민총회를 개최하여 동우대가 「동우대-동우대 발전 범대위」간 체결된 합의서의 협약이행 의지가 없음을 결정하고 2007. 3. 31일 합의서 내용의 원천무효와 그 책임은 동우대에 있음을 선언하고 동우대 이전을 강력히 반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시는 2007. 12. 5일 동우대 재단 이사장과의 면담을 통해 지역주민들의 대학이전 반대의견을 강력히 전달하는 한편, 대학의 학과이전 보다는 현재 동우대 활성화를 위해 공동의 노력을 경주토록 협의한 바 있으며, 이를 위한 시범시책사업 일환으로 김강수 의원께서 제안하신 바와 같이 우리 시 홈페이지에 동우대 홈페이지 배너를 링크시켰으며, 동우대학에 11개 상시학습과정을 개설하여 현재 우리시 산하직원 306명을 대상으로 하는 상시학습 위탁교육 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동우대 학교측에서는 온천개발에 따른 개발계획을 수립중에 있다고 하였으며 市에서는 동우대 학교측의 신청이 있을 경우 해당 개발지역에 대한 토지 용도변경(지구지정후 1年 이내)과 온천개발 계획수립(지구지정후 3年이내)절차가 마무리 되면 온천 개발 및 실버하우스 건립사업이 본격화 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답변하셨는데 현재까지의 추진사항에 대하여 질문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우대학 온천개발과 실버하우스 건립사업과 관련한 추진 사항은 지난 제156회 임시회 시정질문에서 답변드렸듯 2002. 12. 30일 市의 동우대 온천발견 신고수리 통보를 시작으로 2004. 10. 18일 강원도 경유와 2005. 5. 11일 행정자치부의 온천원 보호지구 지정 신청과 반려, 동우대의 2005. 7. 28일 감사원 심사청구에 대한 2005. 9. 11일 감사원의 심사청구 인정 그리고 2006. 12. 29일 강원도로부터 온천원 보호지구 지정승인 되었으며,

이에 대해 2007. 4. 3일 강원도를 상대로 척산온천원부존지역과 중복된다는 이유로 소학레저개발(주)에서 온천원 보호지구지정처분 취소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어 관련 개발행위허가 및 온천개발 계획수립 관계는 재판결과에 따라 향후 추이를 지켜 봐야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김강수 의원께서 질문하여 주신 동우대 일부학과 원주 이전에 대비한 지역경제 위축 등 피해 최소화대책에 대한 강구와 市차원의 적극적인 추진에 대한 사항은, 그동안 동우대학과 인근 주민이 주축이 된 사회단체 간의 충분한 논의를 통해 자율적인 의견합치를 이루도록 오랜 시간을 두고 지켜봐 왔지만 작금의 현실은 모두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시 존립기반 자체를 뒤흔들 수 있는 중차대한 현안으로 불거져 왔습니다.

따라서, 우리시는 지역안정과 화합을 도모하기 위하여 의지를 가지고 동우대학과 사회단체 모두와 충분한 의견수렴을 통해 현안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세부 연구용역을 추진하는 한편, 대학과 주민 모두 상생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할 수 있도록 책임감 있는 자세로 중재 역할을 함으로서 대학과 주민 그리고 지역사회가 상호 공존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데 심혈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동우대학은 우리 지역과 함께 영원히 함께 해 나가야 할 향토도량입니다. 동우대학 이전은 단순한 일부이전이 아닌 장기적으로는 우리지역 향토교육 산실을 잃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시는 동우대학과 공존할 수 있는 방안을 최우선적으로 추진하고 만약, 일부학과 이전이 되더라도 우리 지역 피해가 최소화되고 지역향토 도량인 동우대학이 충분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다각적이고 현실적인 대책을 강구하도록 노력을 경주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市政質問 答辯書

質問의원	김 강 수	소관부서	속초항물류사업소
제 목	심층수 개발 이대로 좋은가	답 변 자	시 장
〈 질문요지 〉 지난 2007. 10. 22일 시와 (주)대한싸이로간 협약체결 한 바 있는 심층수 개발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는지 여부와 추진 중 몇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과 관련하여 1. (주)글로벌심층수가 계획하는 시설의 설치와 관련하여 건축 가능 면적이 부족하여 도시계획을 변경하여야 한다는 주문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도시계획시설 변경계획이 있는지? 2. 외용치 어촌계와의 동의에도 불구하고 그 외 주민들과의 민원 발생시 해결방안은 어떻게 구상하고 있는지? 3. 사업부지의 매각과 임대에 대한 추진상황과 토지 매각 및 임대 후 건축물 건축중 사업에 변화가 발생하여 추진하는 사업이 중단 될 경우 또는 상시고용인원 50인이 미달되었을 경우 부지의 환매와 원상복구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지? 4. 해양심층수 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업무를 해양수산과나 속초발전추진단에 이관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업무부서 변경 의향은?			

〈 답변내용 〉

○ 다음은 시의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해양심층수 개발 등 다양한 속초 미래발전 사업들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조언을 해 주시는 김강수 의원님께 다시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해양심층수 개발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좋은 고견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속초시는 그동안 활기찬 수산활동과 더불어 산·바다·호수·온천등을 활용한 자연환경을 기반으로 관광산업을 주축으로 성장하여 왔습니다만

속초관광은 미래 관광변화에 부응할 수 있는 관광레저시설이 크게 부족하고, 관광객을 오래 머무르게 하면서 체류시킬 수 있는 외래 관광객의 관심과 흥미를 끌기에는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관광산업의 새로운 도약과, 환동해 항만·물류 중심의 도시기반을 다지는 것이 무엇보다도 우선되어야 할 최우선의 과제라고 봅니다.

○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바다의 자원적, 산업적 가치는 해양생태계 기준으로 볼때 매년 22조 달러로 육상 생태계의 2.2배에 달한다고 합니다.

향후 해양산업의 무한한 가능성과 확고한 잠재적 가치는 수치로 환산할 수 없을 것입니다.

금번 속초에서의 해양심층수 개발도 이러한 맥락에서 접근하고 있습니다.

해저지형상 우리나라에서는 동해안과 울릉도 일부에서만 개발이 가능하고 전국적인 경쟁을 피할 수 있는 청정한 해양심층수가 속초 연안에 무한히 존재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 속초의 보고(寶庫)라고 아니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 시의 보고인 속초 해양심층수를 이용한 해양관광시설 및 해수치료단지, 수산축양 및 전시판매단지 등을 조성하여 내방객을 증가시킨다든지, 당일 관광을 장기체류 휴양형 관광으로 전환시킬 경우 속초시에 미치는 경제적 파급효과는 매우 클 것이다 라는 기대를 가져보면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1. 먼저, 도시계획 변경계획이 있는지에 대하여는

- 해양심층수 개발사업자인 주식회사 글로벌 심층수에서, 시설 배치 및 면적 등의 상세 설계가 제출되지 않은 상태에 있기 때문에 수질환경사업소의 유희부지내 건축면적을 아직 판단할 단계가 아니라고 여겨집니다.
- 다만 사업자가 초기 구상단계에서 밝힌 4,000㎡(1,210평) 정도의 수산물 보세창고 및 수산물 축양시설 건축면적이 소요된다면, 도시계획시설 변경여부에 대한 타당성을 충분히 검토한 후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2. 해양심층수 취수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외용치 어촌계 외 주민들의 민원발생시 해결방안은 무엇인지에 대하여는

- 해양심층수의 개발을 위하여는 필수시설인 취·배수라인의 해저설치가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 취·배수관로의 외용치어촌계 마을어업권 통과와 관련하여 외용치 어촌계의 민원을 김강수 의원님의 적극적인 중재와 협조로 사용동의를 구한 바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그리고,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어촌계의 동의에도 불구하고 크고작은 민원이 상존하리라 여겨집니다. 주식회사 글로벌심층수에서 상세 설계가 나오는 대로 어업인 대표와 인근 주민을 대상으로 본 사업의 취지와 내용을 충분히 설명드리면서 이해와 협조를 구할 계획입니다.
사업자로 하여금 시설물 설치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주민들의 우려를 최소화 되도록 저감방안을 사전 강구, 시행토록 행정지도를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3. 부지의 매각과 임대에 대한 추진상황과 사업중단 또는 조건 미이행 등에 따른 매각 및 임대재산 환매와 원상복구 방안에 대하여는

⇒ 먼저 추진상황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 해양심층수 개발사업 부지는 크게 두가지입니다.

사용수익·허가부지에는 보세창고가 설립될 예정이고
매각부지에는 생수공장, 사무실 등을 설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사용수익·허가대상 부지는 현재 사업자로부터 시설물배치 및 사용면적등의 기본계획이 제출되고 있지 않아 구체적인 사용수익 허가계획 수립은 사업자로부터 기본계획이 제출되는 대로 검토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 매각대상 부지는 총9,999㎡(3,024평)으로서 사유지가 1,210㎡(366평), 시유지가 8,064㎡(2,439평), 국유지가 725㎡(219평)입니다.
- 사유지는 이미 사업자가 매입계약을 체결하였고, 사유지내 묘지 이장이 완료되는 즉시 등기이전을 할 계획입니다.

- 시유지는 지난 3월 13일 시정조정 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건축물 인허가시 경관형성심의 위원회의 경관심의를 득하는 조건으로 시유재산 매각 결정을 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우리 시가 제시하는 매각이행 조건을 충족하는 몇 가지의 조건을 사업자와 합의되는 즉시 시 의회에 매각 승인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 그리고 나머지 국공유지(재경부)는 시유지의 매각이 이루어지면 국유재산 관리·처분기준 제3조 규정에 의거 관리청인 강원도에 승인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 다음은 사업미착수 또는 조건미이행시 대처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 해양심층수 개발사업자인 주식회사 글로벌심층수의 참여의지를 볼때, 매각부지와 임대부지에 대한 목적외 사용 또는 사업의 중도 포기는 없을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본 사업의 안정적 추진과 혹여 발생할 수 있는 우려를 담보하기 위하여

- 먼저, 매각부지에 대하여는

법상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에 거주하는 종업원이 50명 이상이거나 원자재의 50% 이상을 당해지역에서 조달하는 경우로서, 위 사업자는 50명 이상의 종업원을 고용할 뿐만 아니라 지역 부존자원인 해양심층수를 사용할 계획으로 있어, 수의계약 조건에 해당 된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을 미착수 할 경우에는 계약시 특약조건으로 환매 할 수 있도록 명시할 계획입니다.

- 사용수익·허가 부지에 대하여는

공유재산 관리지침에 의거 공사원가 계산서상의 총 공사비의 10% 이상을 원상회복 이행보증금으로 예치토록 하여 재산 관리에도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4. 해양심층수 개발사업 추진업무의 담당부서 변경의향에 대하여는

○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속초의 해양심층수 개발사업의 추진방향은 속초항을 활용하면서, 관광지인 속초해수욕장 인근 부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관계로 타 시군과의 차별성은 뚜렷합니다.

○ 타 시군의 담수화(생수)시설 중심의 전략과는 달리 우리 속초시는 생수위주의 산업이 아닌 북한·러시아·일본등에서 속초항으로 수입되는 각종 수산물의 축양·유통하는 사업과

저온창고, 제빙시설, 냉동고 동결시설과 속초해수욕장 등 관광단지 내에서 해양심층수를 활용한 관광 및 치료시설, 그리고 젓갈 등 지역 특성화 산업에도 공급하고자 하는 다각적인 개발 전략으로 추진하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해양심층수사업에 대해서는 단편·일률적인 시각의 추진 보다는 다양한 콘텐츠와의 연계성을 고려한 사업 추진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 금년 4월 3일 외옹치지구를 취수해역으로 지정받아 개발면허 신청 등 본 사업이 본격적인 착수단계에 있고, 속초항으로 수입되는 수산물을 관리, 활용하여야 한다는 점 등과, 현재 해양심층수 업무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있음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주관부서 변경 등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 앞으로, 각종 제반여건의 구축으로 정상적인 운영에 들어서는 시점에서는 다양한 판로개척과 지역특성화 산업과의 연계성등을 고려하여 관련 부서간에 긴밀한 협력을 통해 원활히 업무를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 속초시는 앞으로 새로운 가치창조와 지역발전을 위하여 해양심층수를 속초발전의 핵심산업으로 육성·발전시키는데 전 행정력을 쏟을 계획이며, 돌다리도 두드려가는 심정으로 주도면밀하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이 하루빨리 본궤도에 진입할 수 있도록 김강수 의원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